

한·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이순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sclee@kiep.go.kr, Tel: 3460-1025)
최윤정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yjchoi@kiep.go.kr, Tel: 3460-1039)

주요 내용

- 한국과 인도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7일 정상회담에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을 포함하는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관한 협상을 3월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인도는 자국내 좌파 및 산업계의 FTA에 대한 반감 축소와 FTA 추진에 따른 상품교역 여건의 악화를 동시에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경제 협력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요구할 전망이다.
- 인도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사회후생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는 인도와의 FTA 협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자극함과 동시에 중국과는 FTA 협상시 최대한 제조업 부문의 양허품목 제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과의 FTA를 활용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인도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지역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에 의한 대규모 투자유인과 동시에 동남아는 물론 남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는 만큼 기대 이상의 빠른 협상 진행과 타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인도와의 CEPA 조기 타결이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거대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인도 CEPA 협정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분야의 민감 품목을 최대한 피해나가고, 상호 보완적 분야의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인도의 FTA 추진 동향

가. 인도의 FTA 추진 개요

- 인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 개도국 위주 또는 주변지역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소극적 개념의 국제경제협력 정책에 의해 다목적 또는 다자간 FTA 체결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음.
 - WTO 등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 역내 영향력 확보 등 인도 주변지역 및 개도국 위주의 경제협력 또는 국제관계 형성이라는 협의적 FTA 추진에 노력
 - 2000년 이전 인도의 자유무역협정은 스리랑카와의 FTA가 유일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등 주변 최빈국에 대한特惠무역협정이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부분이었음.
- 그러나 1991년 이후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한 성장잠재력 시현과 대외경제 경쟁력 확대 및 국제경제협력을 위해 FTA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로 전향함.
 - 인도는 1991년 경제위기 이후 개혁과 개방 정책에 의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주요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 중국이 개방을 통해 이룩한 정치·경제적 발전과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협력과 투자 유치 등의 레버리지 효과에 자극을 받음.
- 또한 세계적인 지역 경제통합으로 인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각국의 FTA 확대에 의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도정부도 주변 또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함.
 - 최근 중국이 ASEAN 등과의 FTA에 적극 나서는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장함에 따라 이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게 됨.
 - 한편 ASEAN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FTA가 논의됨에 따라 인도가 소외당할 위험이 커졌음. 이에 따라 인도는 ASEAN과의 FTA를 논의하면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적극 검토·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인도는 WTO 협상에서 개도국(G-20)의 이해를 반영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실리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자간 협상과 동시에 양자간 협상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함.

나. 인도의 FTA 체결 및 추진 추이

-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및特惠무역협정은 다음과 같이 체결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인도는 우선 태국,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ASEAN 및 방글라데시와 협상 중에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과는 공동연구 중인.

표 1. 인도의 자유무역협정과 경제협력 현황

	特惠무역협정(PTA)	자유무역협정(FTA)	기타 지역협력연합
주요내용	특정국가 또는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 우대	역내 무역자유화, 역외 독자적 관세주권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른 경제협력
기체결	방글라데시(1980) 네팔(1991) 부탄(1995) 미얀마(1995) SAPTA(1995) 아프가니스탄(2003) MERCOSUR(2004)	스리랑카(합의: 1998/발효: 2000) 태국(합의: 2003/82개 품목 조기실시계획 시행, 발효: 미정) 싱가포르(합의: 2005. 6/발효: 2005. 8) SAFTA(합의: 1995/발효: 2006. 1 단계적 발효, 최종합의: 2016 예정)	방콕협정(1975) SAARC(1985) BIMST-EC(1997) IORARC(1997) BOBCOM(1999) IBSA(2004)
협상중	칠레	ASEAN(합의: 2002/종결: 2006 예정) 방글라데시(합의:2002/종결:미정)	
검토중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중국, 한국, EU, 칠레,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이집트, MERCOSUR, 일본, 모리셔스, IBSA, GCC	

2. 한·인도 CEPA와 인도의 전략

가. 한·인도 CEPA 추진 현황

- 한·인도 양국 정부는 지난 1월 5~6일간 서울에서 CEPA 공동연구를 최종합의하였으며, 2월 서울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간 정상회의에서 3월부터 CEPA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함.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인도 내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국간 합의에 의해 상품무역자유화의 일반적 개념인 FTA을 벗어나 경제·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포괄한 협정을 의미

글상자 1. 한·인도 공동연구(JSG) 경과 개요

-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발족
 - 2003. 12. 한·인도 외무장관회의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 JSG 협의
 - 2004. 5. 대외경제장관회의: 단기 FTA 추진 대상국 지정
 - 2004. 10. 한·인도 정상회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당성 검토 등 JSG 설치 합의
- 한·인도 JSG 회의 경과
 - 2005. 1. 한·인도 양국 정부의 차관급 인사 주재로 JSG 1차 회의 개최, 8월까지 3차 회의 개최
 - 2005. 11. 국장급 실무회의: 공동연구보고서 최종 문안 실질적 합의, 제4차 회의시 보고서 공식 채택 합의
 - 2006. 1.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양국 공식 채택, CEPA 협상 공식 개시 협의
- 한·인도 CEPA 공청회 개최(2005. 12. 5)

- 한국과 인도 양국이 CEPA 협상을 공식 개시하게 됨으로써, 양국은 GATT 및 GATS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과 비관세장벽의 한계를 넘어선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투자·경제 협력, 제도적 협력 등 양국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는 FTA 협정을 추진하게 됨.

- 구체적으로 한·인도 CEPA 협상의 주요 내용은 △ 공산품 및 농축산물을 포함하는 상품교역분야 △ IT관련 서비스, 금융, 통신, 건설, 운송 등 상당한 범위의 서비스 분야 △ 무역원활화 조치 △ 투자분야 △ 이중과세방지법, 과학기술협력, 관세협력, 기업 및 전문인력의 이동, 기업간 협력 등을 포괄하게 됨.

나. 인도의 CEPA 전략

■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과의 FTA 추진 가속화 전략

- 인도는 자국의 교역 및 투자 유치 증대, 인접국가와의 경제관계 강화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SAFTA, 스리랑카 등 인근 국가와의 FTA뿐만 아니라 경제발전단계에서 앞선 한·중·일

동북아 3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와 조속한 FTA 체결 전략을 추진중임.

- 특히 인도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 철폐로부터 발생하는 사회후생효과가 가장 큰 반면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효과는 일본과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표 2. 인도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 철폐의 후생효과 추정

구분	일본(A)	A+중국(=B)	B+ASEAN(C)	C+NIEs(D)	D+RSA+ANZ
농업+제조업	1.2	1.3	1.3	1.3	1.5
제조업	0.7	0.8	0.8	0.8	1.0
농업	0.5	0.5	0.5	0.5	0.5

주: NIEs는 홍콩, 한국, 태국, 싱가포르, RSA는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ANZ는 호주와 뉴질랜드.

자료: NCAER(2004), *Toward Japan-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 그러나 일본의 신중한 태도로 인도-일본간 FTA 협의가 지연되어 인도의 對동북아 경협 확대 정책에 애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한국이 인도 시장에서 선점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국가들과의 FTA 협상, 특히 일본과의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우세한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으로부터 인도와의 FTA 협상 추진을 앞당김과 동시에 FTA 협상시 최대한 제조업 부문의 양허품목을 축소하고 서비스, 투자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천명하고 있으나, 양국간의 교역구조 면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매우 낮고, 또한 공산품가격 및 품질 면에서도 중국이 앞서고 있어, 만약 인도가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경우 상대적으로 인도측에 불리할 수 있음.
 - 2003년을 기준으로 인도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5%, 중국의 대인도 교역규모는 0.8%로 매우 낮고, 제조업부문의 양국간 교역에서 비슷한 품목이 많으며, 또한 가격은 절대적으로 중국제품들이 낮아 양국간 교역 확대시 인도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양국간 상호 보완성이 높다는 IT 분야에서도 비록 인도는 소프트웨어에 강하고 중국은 하드웨어에 강하다고 하나, 중국 역시 IT 전 분야를 적극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IT 분야에서 노동집약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상호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과 국경이 접한 지역의 교역이 대폭 증가하고, 또한 UN에서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 확보, 에너지 및 지역안보 등에 의해 상호간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인도는 한국과의 FTA를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인도의 제1수입대상국인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과의 조속한 FTA 협상을 추진하나 상품부문에서 최대한 양허품목을 제한하는 한편 인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서비스부문의 교역 확대를 최대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이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 3국과의 FTA 추진 성과가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특히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경제적·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모리셔스와 미국이지만, 최근 가장 많은 투자증가율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최근 네덜란드를 제치고 외국인 직접투자 3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POSCO가 오리사주에 12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그 투자파급효과가 18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도는 한국과 일본 등과 신속하게 FTA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인도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 및 아시아 공동체에서의 중국 일방주의 견제, ASEAN의 거대시장 부상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국가와의 FTA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포괄적 FTA를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 협력분야의 확대에 경제이익 극대화에 경주하면서 기대 이상의 빠른 협상 진행과 타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기존에 체결한 FTA 추진 결과 일부 외국인 기업이 ASEAN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좌파를 중심으로 산업계 및 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는 FTA에 대한 반감을 축소하기 위하여 FTA로 인한 상품 교역상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통상현안을 개발해나간다는 ‘광의의 FTA’ 전략을 추진함.
- 특히 인도가 FTA를 통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서비스 지식과 인력을 수출함으로써 국내인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인도보다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국가로부터 통신, 운송, 전력, 금융서비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조업 분야의 성장과 효율성을 제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인도는 한국과의 CEPA에서도 무역자유화시 한국의 제조업에 대한 교역여건의 상대적 열위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비교우위제품에 대하여 적극적인 통상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인도가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의료, 변호사, 교육 등 서비스분야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한국 진출에 심도 있는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인도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 품목의 자유화 대상 정도에 따라 전체 상품 교역의 상대적 효과에 차이가 남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더 많은 농산물을 포함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

표 3. RCA 분석에 의한 한-인도 잠재적 교역 확대 가능 분야

구분		한국	인도
교역제품	높은 비교우위	기타 수송수단, 전기전자, 기계류	비금속광물, 의복 관련 제품, 곡식 관련 제품, 어류 등
	낮은 비교우위	섬유 및 의류, 화공, 철강 및 금속제품	섬유사, 식물, 식물제품 및 모피
비교역제품 비교우위		일부 가공식품 및 화공제품, 철도, 특수선박, 오디오, 기계류 등	철 및 강, 고무제품, 유기화학물

주: 1) 높은 비교우위: 현재 교역제품으로 무역수지 흑자 품목, 낮은 비교우위: 교역비교우위는 존재하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교역되거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교우위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분야

2) 비교역제품 비교우위: 비교우위는 있으나 현재까지 양국간 교역이 전혀 없는 분야

자료: KIEP(2005), 『인도의 대외 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3. 한·인도 CEPA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가. 한·인도 CEPA의 기대효과

- 한·인도 CEPA 추진은 단순한 양자간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인도는 한국과의 CEPA 체결을 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속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지역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에 의한 대규모 투자 유입과 동시에 동남아는 물론 남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는 면이 있음.
- 한국은 인도와의 CEPA로 33억 달러 이상의 교역증대, GDP 1조 3천억 원 증가, 국내고용

약 4만 8천 명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CEPA 조기 타결을 통해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여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먼저 거대인도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큼.

- KIE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인도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對인도 수출은 28억 달러, 수입 5억 달러 증가)가 기대되며 우리 GDP는 1조 3천억 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원 증가되고, 4만 7,600명의 고용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2004년 기준).

표 4. 한· 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2004년도 국내기준)

구 분	FTA 체결 전 (2004년)	FTA 체결 후 금액	
		금액	변동액
국내총생산(GDP)	778조 4천억 원	779조 7천억 원	↑ 1조 3천억 원 (0.17%)
1인당 국민소득	14,162달러 (1,621만 원)	14,186달러 (1,623만 원)	↑ 24달러(3만 원)
가구당 평균소득	3,036만 원	3,041만원	↑ 5만 원(0.17%)
대인도 교역량	55억 달러	88억 달러	↑ 33억 달러(60%)
대인도 수출	36억 달러	64억 달러	↑ 28억 달러(80%)
대인도 수입	19억 달러	24억 달러	↑ 5억 달러(30%)
무역수지	17억 달러	40억 달러	↑ 23억 달러
국내 취업자수 (제조업)	1,668만 명	1,672만 7,600명	↑ 4만 7,600명

자료: KIEP 보고서 및 외교통상부 공청회 자료

나. 시사점

- 인도는 상품교역 면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한인도 CEP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품 외 서비스, 투자,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조할 것이므로, 한국은 이 분야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접근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 한·인도 CEPA 추진시 교역여건이 한국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관세율이 높은 인도측의 교역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는 보다 많은 서비스업 진출과 투자, 그리고 전문인력 이동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특히 인도측은 기업인 인력이동은 물론 전문인력이동과 전문분야 상호인정협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 이에 대해서는 국내법내에서 정하되, 전문인력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자절차 간소화 정도로 양국간 협력을 모색하고, 또한 비자 간소화 조치가 국적, 영주,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GATA 부속서상의 항목에 따라 제한해야 할 것임.
- 인도의 조기 타결 전략을 최대한 이용하여 농수산물분야의 민감품목은 피해가고, 상호 보완적 분야의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FTA 협상과는 달리 농산물분야, 특히 쌀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양국간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WTO 기본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협상 옵션을 개발하여 타협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가능한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 중심의 투자 확대에 목표를 두고, 인도의 복잡한 조세 정책, 외환송금 규제 완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수준에서의 투자 승인 및 기타 애로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투자청(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내 특별위원회(Fast Track Committee) 설치 등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국은 한·인도 CEPA 협상으로 인구 11억 명, 잠재적 구매력이 매우 높은 인도를 비롯하여 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시장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바, 산·관·학이 협동하여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현재 한국의 해외 투자 및 교역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잠재적 시장성이 높은 인도와의 교역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한국과 인도는 양국간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에 의해 양국간 시장 잠식 우려가 없이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교역 및 해외 투자의 시장다변화가 필요하므로, 인도로 시장확대를 하는 동시에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의 시장확대를 위해 ‘허브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